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기자
발신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문의	정치·사법팀(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정유림 간사/ 02-3673-2141)
일자	2016. 4. 20(수)
제목	[성명] 노골적인 정치개입, 전경련 즉각 해체해야(총 2매)

노골적인 정치개입, 전경련 즉각 해체해야

이념조장민생외면 보수단체 이용한 국론 분열 조장 행위 규명해야

대기업·재벌들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극우행동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역대 자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이념대결, 국론분열, 사회통합 저해 행위에 나선 것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전경련은 재벌기업들의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노골적인 정치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조직을 해체하기를 촉구한다.

첫째,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관계기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막말, 친정부 성격의 집회와 반대세력에 대한 ‘종북낙인찍기’ 등 극단적 언행과 이념조장에 앞장선 어버이연합 활동에 역대 돈을 지원한 전경련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처럼 흘러간 돈이 집회·시위에 탈북자단체를 가담시키는 인건비로 활용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미 수년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선교복지재단의 계좌는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상황이고, 이 계좌에 2014년 9월,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내역에 표시된 전경련 명의의 거래는 기업금융거래망인 ‘펍뱅크’를 사용한 것으로 개인 बैं킹이 아닌 법인 बैं킹으로 타인이 전경련 명의를 사칭하기 쉽지 않다. 이는 두 단체가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국론분열, 사회통합 저해하는 전경련을 즉각 해체하라.

2014년은 연초부터 어버이연합이 쌍용차하고 노조원들과 서울 대한문에서 충돌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에 대한 어버이연합의 매도공세가 한창이었다. 그동안 어버이연합은 노조가 집회를 계획하면 먼저 같은 자리에 집회신고를 하는 ‘알박기’에 나서는 것은 물론, 연간 수백차

례에 걸쳐 친정부·보수성향의 시위를 주도해 왔다. 전경련이 이러한 단체에 억대의 돈을 지원한 것은 재벌기업 사익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경제권력으로 노골적인 정치개입에 나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경련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에서도 위장계열사인 자유경제원을 이용해 이념 논쟁과 정치에 개입에 나선바 있다. 당시 자유경제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일부 야당의원들을 종북·좌파라고 낙인찍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며 노골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나섰다. 국론분열, 사회통합을 거스른 재벌단체 전경련의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재계는 스스로 전경련을 해체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